

7월31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6595.45 (+1001.89)		719.76 (+74.98)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3.758 (-0.073)		1439.00 (+15.00)

m-커버스토리

쏟아지는 프리미엄 요양 혜택 줄어드는 중간 가격대 선택지

돌봄 모델 양극화

보험사, 요양시장 본격 진출
프리미엄 중심 선점 경쟁 치열
중간 가격대 공급·혜택은 공백

주요 보험사가 선보이는 도합형 요양원이 늘면서 1·2인실 등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월 이용료가 일반 시설의 2~4배인 250만~480만원대에 형성돼 월 100만원대 초반의 기존 시설과 프리미엄 시설 사이의 '중간 가격대 돌봄'이 공백을 보이고 있다. 돌봄 시설도 양극화가 뚜렷하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는 지난 2015년 59만5974명에서 2024년 125만2649명으로 9년 새 110% 늘었다. 현재 KB라이프·신한라이프·삼성생명·하나생명·KDB생명 5개 생명보험사가 요양시설이나 주간보호 사업에 진출했거나 준비 중이다.

보험사 계열 요양시설은 상급침실 중심으로 설계됐다. 이들 시설 이용자 가운데 1인실은 41.9%, 2인실은 54.9%로 둘을 합친 비중이 96.8%였다. 전국

요양시설 이용자의 1·2인실 비중(20.3%)보다 4.8배 높다. 보험연구원이 집계한 월 이용료는 250만~480만원으로 일반 요양시설(월 100만원대 초반)보다 2~4배 비쌌다.

공개 가격을 같은 이용자 조건으로 맞춰도 간격은 컸다. 장기요양 1등급, 30일 입소, 일반 본인부담률 20%를 가정해 2026년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55만8420원에 요양비교 플랫폼에 게시된 시설별 식비·간식비·상급침실료를 더한 결과 1인실 예상 부담은 ▲미사사랑요양원 127만8420원 ▲KB골드라이프케어 은평빌리지 342만3420원 ▲광교빌리지 351만3420원 ▲신한라이프케어 솔라채 홈 미사 489만3420원이었다.

다만 이는 공개 비급여를 단순 합산한 30일 예상치로 실제 청구액은 아니다. 등급과 입소일수, 감경 여부, 약값·이·마용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위치·인력·공간·서비스도 서로 다르다.

차이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장기요양 수가보다 비급여에서 벌어졌다. 같은 1등급 이용자의 급여 본인부담금은 55만8420원이지만 30일 기준 1인실 상급

침실료는 비교 시설별로 30만원부터 375만원까지 달랐다. 보험연구원은 도심 부지의 높은 땅값과 조달금리 등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상급침실료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공급의 양보다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도 가격 문제와 맞물린다. 한국은행은 선호도가 높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A등급 시설에는 1년 넘는 대기가 생기는 반면 하위 시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상을 '유요 공급' 부족으로 진단했다. 2024년 생애 말기 고령인구 대비 잔여 정원 비율은 서울 3.4%, 전북 12.4%로 지역 격차도 컸다.

보험사 진입은 도심 공급과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상급침실 중심의 고가 모델만 늘어서는 중산층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도지·건물 소유와 시설 운영을 분리하고 장기 입차·마스터리스와 헬스케어 리츠 등을 활용해 초기 투자비를 낮춰 중간 가격대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KTX-SRT, 내달 통합 운행

양대 고속철도인 KTX와 SRT 열차가 9월부터 통합된다. 명칭은 KTX로 통합 운행되며 향후 3년간 KTX 노선의 운임을 현재 SRT 운임과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10% 인하한다. 또한 KTX와 SRT 승차권을 한 번에 예매할 수 있는 통합 모바일 앱 '코레일+'도 출시될 예정이다. 2일 서울역 승강장에 KTX와 SRT 중련열차가 정차해있다. /뉴시스

정부, 증시 '긴급조치권' 예고 2배 레버리지 배율 조정 가능

금융당국,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 긴급한 상황 발생시 시장 안정화 조치

금융당국이 증시를 뒤흔드는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겨냥해 긴급조치권이라는 강도 높은 카드를 꺼내 들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긴급한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최근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 사례를 참조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지난달 24일 자산운용사 운용 역량에 따라 사전 기준 설정·공시 등을 거쳐 상장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배율 조정을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우리도 별도의 법령 개정에 구애받지 않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현재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배율을 낮추는 방안이 핵심으로 거론된다. 이덕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2배인) 배율을 낮출 경우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수익자총화나 투자자 부분을 어떻게 고려할 거냐는 법안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시장 안정화나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긴박한 상황이 있을 경우 현재 2배로 설정된 배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다.

현행법상 수익자 이익과 관련된 것은 수익자총화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에 따라 정부가 적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작용한 부분도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 조치 기한은 상한으로 두고 배율은 하한선을 설정하는 등 방식으로 운신의 폭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배율 조정은 당초 상품 취지에서 벗어나는 만큼 적극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홍콩에서 배율 조정 제도가 도입되고 증시가 극도로 출렁이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일각에서는 거래제한 또는 정지까지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한다. 일례로 금융위원회는 불법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작년 4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

다만 이는 주식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부 종목을 규제 대상으로 특정하면 포괄적 조치권의 당초 취지와 괴리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시장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메인이 단일종목 레버리지고 다른 대상을 포함해야 하는지는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간 시장이) 여러 차례 혼란을 겪었지만 긴급조치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으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느꼈던 상황을 복기하면서 사례를 수집 중"이라고 전했다.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19 등 증시 변동성이 극심했던 전례를 들여다보고 당시 정부가 필요하다고 봤던 조치 중 적용할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모의거래 의무화, 거래비용 부담 등도 추진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metro

상반기 개인회생 급증... 사상 첫 8만건 돌파

고물가·고환율·증시 등 복합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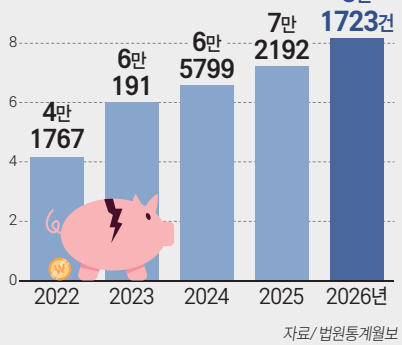
올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8만건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코스피지수가 급등락을 지속하고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연내 개인회생 신청이 16만건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2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6월 개인회생 신청은 8만172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7만2192건) 대비 13.2% 증가했다.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0년 전인 2016년 4만7229건에서 2022년까지 4만 건대에 머물렀다. 이후 2023년 6만 건대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 7만 건을 넘어섰고, 올해 처음으로 8만 건을 돌파했다.

개인회생 신청 급증 배경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과 내수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1분기 자영업자 연체액은 역대 최대인 22조3000억원

개인회생 신청건수 추이

상반기 기준, 단위: 건



자료/법원통계월보

을 기록했고, 가계신용 잔액도 2000조원에 육박했다. 부채 상환 여력이 약해진 가계와 자영업자들이 법원의 채무조정 절차로 내몰리고 있는 것.

최근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자영업자뿐 아니라 청년층과 근로소득자에게까지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1025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

균 채무액은 6926만원으로 집계됐다. 최초 채무 발생 원인으로는 생활비 마련이 67.9%로 가장 많았고, 주거비 28.9%, 과소비 26.5%, 가족 지원 19.9%, 사기 피해 18.0% 등의 순이었다. 특히 사기 피해 비중은 전년보다 2.9%포인트(p) 상승했다.

주거비 상승도 채무자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전환 가속화로 매달 부담해야 하는 고정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주거비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존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내 주식시장 하락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하반기 개인회생 신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근 코스피지수가 올해 고점 대비 약 40% 하락하면서 주식 투자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의 채무 여건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조국 “尹 뜰 때 나는 바닥... 7년 만에 엇갈린 운명 뒤집혔다”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법’에 연일 공세... “헌법소원 심판 나설 것”

▲외교부, 中 현지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관리 현황 점검
▲한동훈, 與 보완수사권 폐지에 “원대실에서 토론하라... 끝까지 코미디”



▲한 총리, ‘폭염 2단계 격상’에 범정부 적극 대응 긴급지시
▲폭염 장기화에 중대본 2단계 가동... “국민 피해 최소화”

/사진 뉴시스